

미리 보는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및 트럼프 주요 정책 공약

- ◆ 내년 미국 대선과 의회선거, 여론조사 동향, 주요 관전포인트 등 점검
- ◆ 아이오와 코커스 향배, 트럼프 사법 리스크, 바이든 후보 경쟁력, 제3 후보 효과 등 주목
- ◆ 트럼프 공약 키워드 : 경제(미국/성장 우선) · 무역(상호주의) · 에너지(자립) · 대외(고립주의)

1. 2024년 미국 연방 선거 개요

① (대선) 60번째 미합중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가 내년 11.5(화) 개최

-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고,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포함 6명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
- 공화당은 7.15~18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, 민주당은 8.19~22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공식 추대 예정
 -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지명 외에도, 새로운 정당 강령(Party Platform)을 공개하여 양당이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정책 향배를 가늠할 기회 제공

② (의회)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·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선거 진행

- (하원) 전원 435석을 두고 전국 선거 개최. 지난 '20년에 치러진 연방의회 중간선거로 결정됐던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변동 여부에 관심
- (상원) 전체 100석 중 1/3에 해당하는 33석과 보궐선거(2석) 포함 총 35석을 두고 양당 대결.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2석 차 다수당 지위 수성 여부가 관건

< 현 118대 연방의회 의석 현황(석) >

| 구분 (정원) | 민주당 | 공화당 | 기타(공석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하 원 (435) | 213 | 221 (다수당) | 1 |
| 상 원 (100) | 51* (다수당) (* 무소속 3명 포함) | 49 | - |

[자료] 미국 연방의회 홈페이지(12.19 기준)

③ (주지사) 11개 주*와 2개 미국령(푸에르토리코, 미국령 사모아)에서 주지사 선거

○ 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8개 주, 민주당 현직 주지사가 3개 주로 분류*되며, 뉴햄프셔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현재 박빙의 경합지역으로 나타남.

* 현 주지사 소속 정당 : 델라웨어(민), 인디애나(공), 미주리(공), 몬태나(공), 뉴햄프셔(공), 노스캐롤라이나(민), 노스다코타(공), 유타(공), 버몬트(공), 워싱턴(민), 웨스트버지니아(공)

- 현재 50개 주 주지사 소속 정당 비율은 공화당 27 : 민주당 23으로 공화당 우세

<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일정 >

| 구분 | 일정 | 내용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선 | 1.15 |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 |
| | 1.23 | 뉴햄프셔 |
| | 2.03~3.04 | 사우스캐롤라이나, 미시건 등 7개 주 |
| | 3.05 | 슈퍼 화요일(캘리포니아, 텍사스, 버지니아 등 16개 주) |
| | 3.12 | 조지아, 하와이, 워싱턴 등 4개 주 |
| | 3.19 | 애리조나, 플로리다, 일리노이 등 5개 주 |
| | 3.23 | 루이지애나, 미주리 |
| | 4.02 | 뉴욕, 위스콘신 등 5개 주 |
| | 4.13, 4.20 | 와이오밍(민주당 4.13, 공화당 4.20) |
| | 4.23 | 펜실베이니아 |
| | 5.07 | 인디애나 |
| | 5.14 | 메릴랜드 등 3개 주 |
| | 5.21 | 켄터키, 오레곤 |
| 6.04 | 뉴저지, D.C 등 5개 주 | |
| 전당대회 | 7.15~18 | 공화당 전당대회 (위스콘신주 밀워키 개최) |
| | 8.19~22 | 민주당 전당대회 (일리노이주 시카고 개최) |
| 후보 토론 | 9.16 | 대통령 후보 1차 토론 (텍사스 개최) |
| | 9.25 | 부통령 후보 토론 (펜실베이니아 개최) |
| | 10.01 | 대통령 후보 2차 토론 (버지니아 개최) |
| | 10.09 | 대통령 후보 3차 토론 (유타 개최) |
| 투표 | 11.05 | 2024년 대통령 선거일 |
| | 12.17 | 대통령 선거인단(Elector) 투표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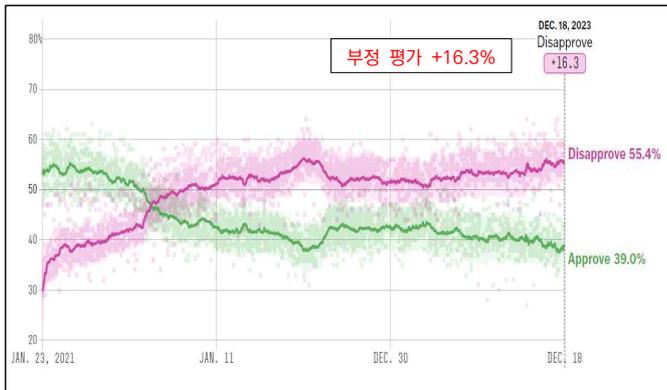
[자료] NBC, 270toWin.com

2. 선거 여론조사 동향

①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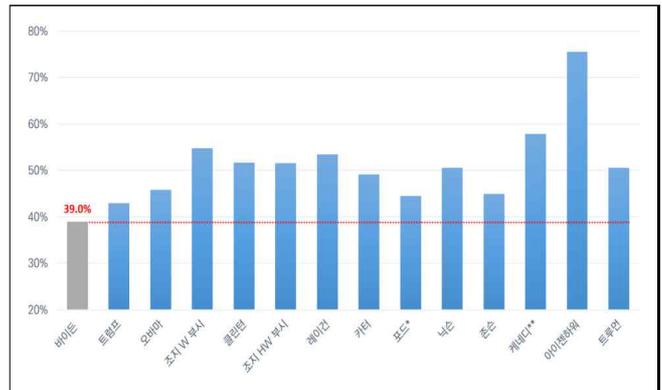
- 대선을 약 11개월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적신호
 - 12.18 현재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평균은 긍정 39.0%, 부정 55.4%를 보여 16.3% 차이로 부정 의견 월등
 - '21.9월 부정이 긍정 여론을 역전한 후, 부정 평가가 두 자릿수 격차로 우세 유지
- 취임 1,063일 차를 맞은 바이든은 동 시점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 기록 중
 - 역대 최저 국정 수행 지지도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% 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도가 순탄치 않을 전망
 - 바이든 대통령 부정 평가는 △백인(59%) △고졸 이하(57%) △농어촌 지역(65%) △남성(54%) △40세 이상(54%) △저소득층(53%) △남부지역(59%)에서 높게 측정

< 바이든 국정 수행 평가 여론(12.18) >



[자료] fivethirtyeight.com

< 취임 1,063일 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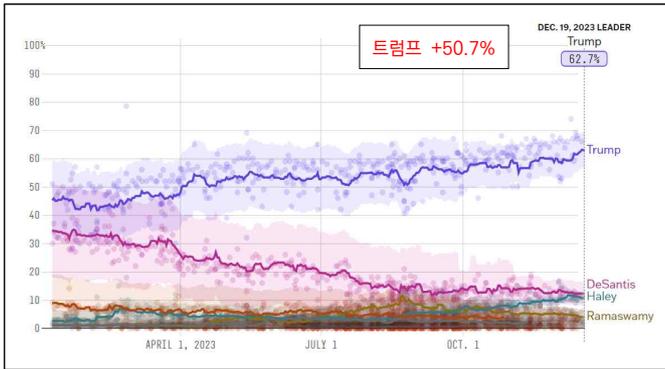
[자료] fivethirtyeight.com *포드(856일차) / **케네디(1,024일차)

②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

-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압도적인 선두 유지
 - 12.19 현재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는 63%에 달해, 2위 드산티스 후보 등과 50% 이상 격차를 벌리며, 공화당 후보로 선출 유력시 (11.29~12.17 8개 여론조사 평균)
 - *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 지지율 : 트럼프(62.7%), 드산티스(12.0%), 헤일리(10.9%), 라마스와미(4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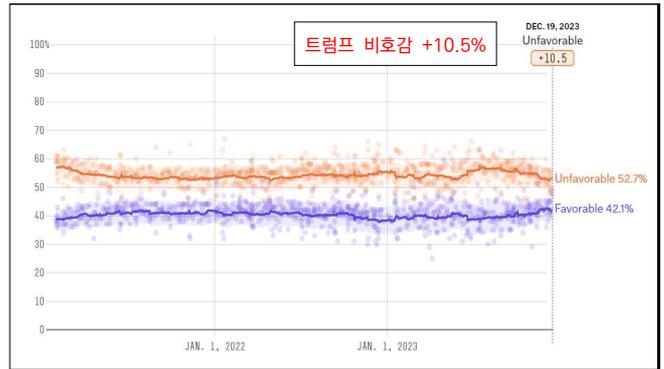
-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여론(52.7%)이 호감(42.1%)에 비해 여전히 10% 이상 높으나, 근래 비호감은 감소하고 호감도는 상승하여, 호불호 격차가 눈에 띄게 감소 중
 - *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(54.7%), 호감(39.8%)으로 비호감 14.9% 우세

<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>



[자료] fivethirtyeight.com (12.19 기준)

<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·비호감 여론조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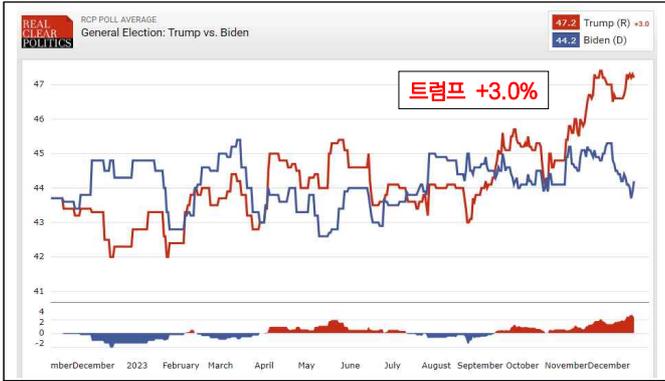


[자료] fivethirtyeight.com (12.19 기준)

③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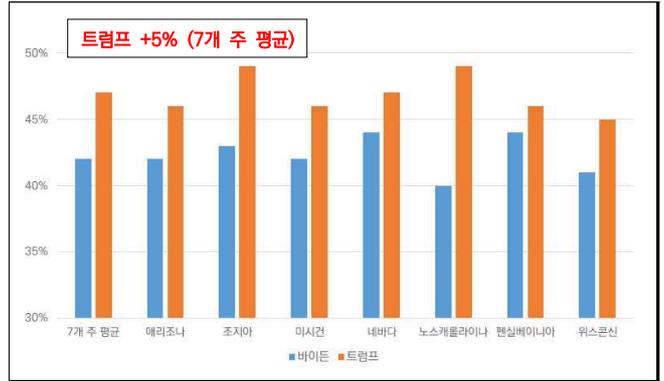
- 바이든 대통령,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주요 공화당 후보에 열세
 - 올해 11월경을 전후로 여론이 바이든 내림세, 트럼프 상승세로 극명하게 분기. 현재(12.19) 양자 가상 대결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평균 3.0%* 우세
 - * RealClearPolitics 집계, 12.4~12.17 전국 9개 여론조사 평균
 - 유권자가 선정한 최대 대선 이슈*인 '경제 문제 해결'에서 트럼프(59%)가 바이든(37%)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여론은 바이든노믹스에 박한 평가 중
 - * 대선 중대 의제 여론 : 경제(19%), 이민(11%), 범죄(10%), 환경(7%), 불평등(7%), 보건(6%) 등 순
 - 바이든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2, 3위 후보에도 뒤지는 조사에 민주당 비상. 드산티스에 0.9%, 헤일리에 5.9% 격차로 열세를 보여 충격
- 선거 승패를 결정할 대표적인 경합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조사 속출
 - 블룸버그/모닝컨설트 여론조사(11.27~12.6) 결과, 대표적 7개 스윙스테이트*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평균 5% 포인트 우세를 보임.
 - * 애리조나, 조지아, 미시건, 네바다, 노스캐롤라이나, 펜실베이니아, 위스콘신
 - 특히,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에 우세 기록

< 바이든-트럼프 양자 대결 여론조사 >



[자료] RealClearPolitics(12.19) 여론조사 평균

< 주요 경합 주 바이든-트럼프 지지율 비교 >



[자료] Bloomberg News/Morning Consult(12.14)

○ 바이든-트럼프 양자 대결을 가정하여 대통령 선거인단 시뮬레이션 결과, 트럼프가 당선 한계선인 대의원 270명 돌파 분석 (270toWin 집계)

- 12.19 기준 여론조사 집계 결과, 트럼프 우세 지역은 28개 주, 바이든 우세 지역은 17개 주(D.C. 포함), 경합 분류 지역은 6개 주*로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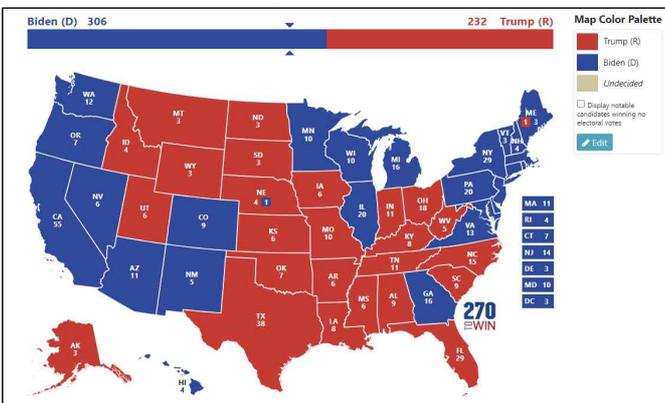
* 펜실베이니아, 버지니아, 위스콘신, 미네소타, 콜로라도, 네바다

- '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미시건, 조지아, 애리조나 등에서 트럼프가 여론조사 우위를 보이면서, 바이든은 최소 42명 선거인단 손실* 분석

- 현재까지 여론조사 판세를 분석했을 때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, 트럼프 277명 확보, 바이든 193명 확보, 미정(경합) 68명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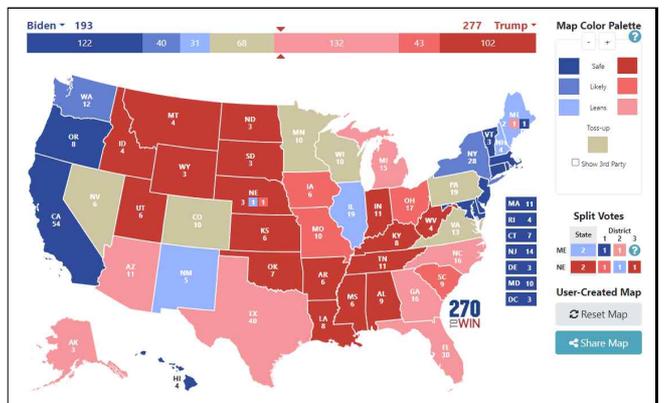
* '20년 대선 결과 선거인단 확보 : 바이든 306명 / 트럼프 232명

< 2020년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결과 >



[자료] 270towin.com

< 2024년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예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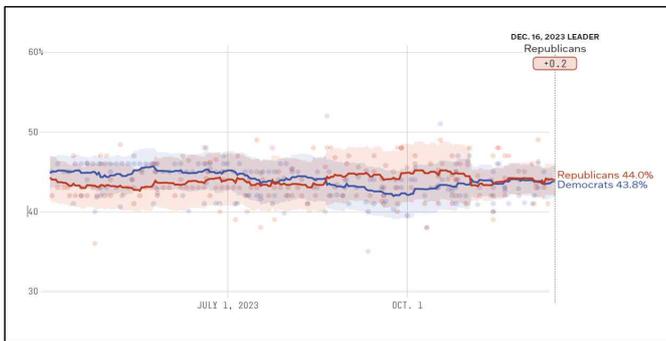


[자료] 270towin.com(12.19 현재)

④ 상·하원 의원 선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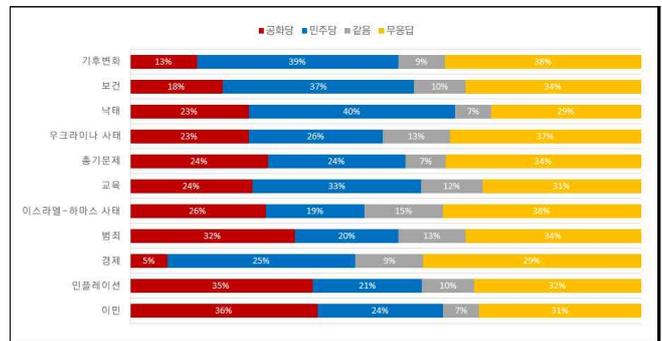
- (양당 지지율) 민주당-공화당 중 정당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가 민주당에 0.2%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임. * 공화당 44.0% : 민주당 43.8%
- '공화당이 경제에 더 잘 대응할 것' 여론이 35%로 민주당(25%)보다 우세. 그밖에 이민, 인플레이션, 범죄, 이스라엘 사태 등에서 공화당에 높은 신뢰

< 민주당-공화당 정당 선호도 조사 >



[자료] fivethirtyeight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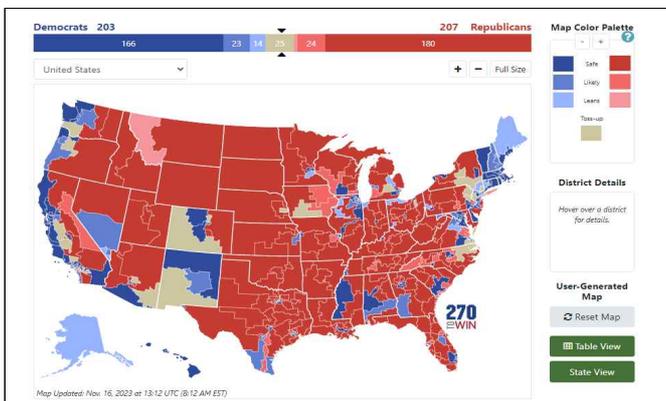
< 정책별 민주당-공화당 능력 평가 설문 >



[자료] ABC News/ipsos(11.3~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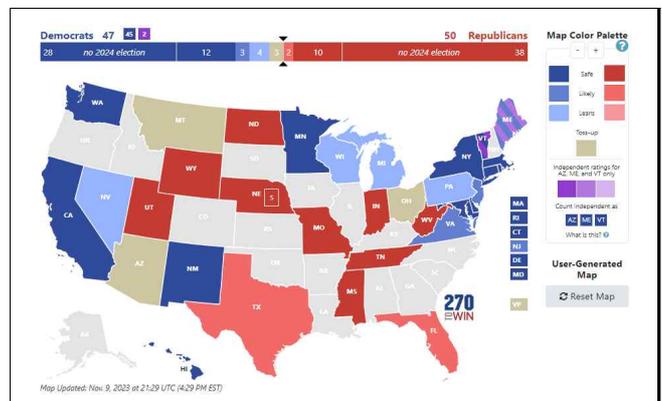
- (하원) 선거구 여론 분석 결과, 공화당이 박빙 우세로 다수당 지위 유지 예상
 - 435개 선거구 중 공화당 207개 우세, 민주당 203개 우세. 경합지역 25곳이 승부처
- (상원) 선거가 치러지는 33개 선거구(보궐 2개 제외) 중 23개가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으로,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구도라는 분석이 주류
 -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지역구(애리조나, 몬테나, 오하이오)가 박빙 지역으로 분류, 이 중 최소 1개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 다수당 탈환

< 2024년 하원 선거 결과 전망 >



[자료] 270twin.com(11.16 기준)

< 2024년 상원 선거 결과 전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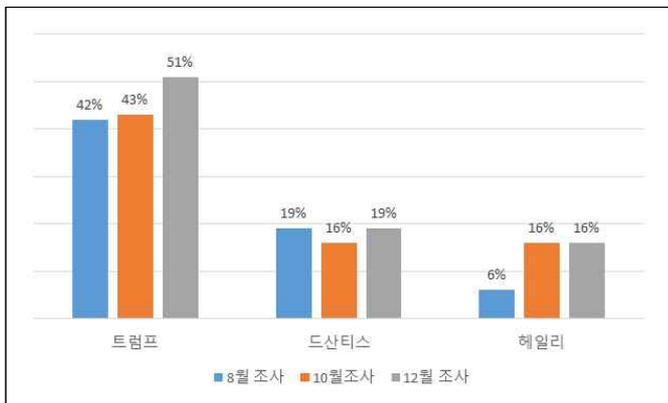
[자료] 270twin.com(11.9 기준)

3. 주요 관전포인트 [12월 현재 기준]

① 누가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기를 잡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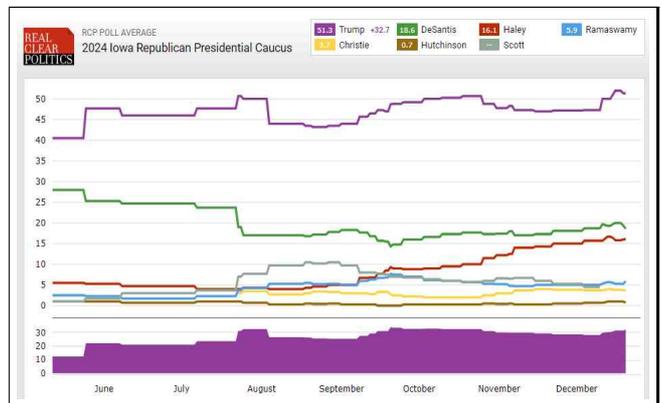
- 내년 1.15 개최되는 공화당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관심 집중
 -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내년 공화당 후보 결정을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역할
 - 일반적으로 조직 동원력이 강하고, 보수 개신교 성향이 짙은 후보에 유리 평가
 - * 프라이머리와 달리 코커스는 유권자가 특정 장소·시간에 모여 공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
- 아이오와주 여론조사 결과, **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우세 유지**
 -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트럼프 포함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, 12월 현재 **트럼프가 여론조사 평균 과반의 지지 획득, 2위 후보와 30% 이상 격차**
 - * 최근 여론조사(12.19), 트럼프 지지율 51.3% 도달. 8월(42%)과 10월(43%) 대비 상승세 완연
- 론 드산티스 또는 니키 헤일리, **당내 2위 주자 경쟁에 더 큰 관심 집중**
 -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2위 후보로 부상할 경우, 반트럼프 성향 공화당 지지자의 구심점이 되어 경선 역전의 **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**고 분석
 - 여론조사 평균(12.19 기준) **드산티스가 18.6% 지지율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(16.1%)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.**

< 아이오와 공화당 후보 지지율 추이 >



[자료] NBC/Des Moines Register/Mediacom(12.11)

< 아이오와 공화당 후보 여론조사 평균 >



[자료] RealClearPolitics(12.19)

② 트럼프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 전망

○ 트럼프 전 대통령, 현재 4개 형사 사건에서 총 91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

- 4건의 형사 사건은 (1) '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, (2) 조지아주 선거 개표 방해, (3) 성 추문 무마 의혹, (4) 기밀문서 유출 및 조사 방해 혐의로 구성
- 법원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 시 트럼프는 최대 700년 형에 처할 위기

<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기소 현황 >

| 형사 사건 | 범죄 혐의 | 관할 법원 | 사면권 보유 | 최대형량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1 연방 선거 방해 | 선거 공무 방해 관련 중범죄 혐의 4건(국가 기만과 권리 행사 방해 등) | 연방법원 (워싱턴 D.C.) | 대통령 | 55년 |
| 2 조지아주 선거 개입 |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, 공무원 회유, 문서 위조 등 13건 | 조지아주 법원 | 주 정부 사면위원회 | 76.5년 |
| 3 기밀문서 유출 | 기밀문서 유출, 반납 지연 및 공무 방해 등 40건 | 연방법원 (남부 플로리다) | 대통령 | 450년 |
| 4 성 추문 무마 | 회계 조작, 선거 자금법 위반 등 34건 | 뉴욕주 법원 | 뉴욕 주지사 | 136년 |

[자료] 폴리τικο, 포브스 등 언론 종합

○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트럼프 공직 출마 자격 정지 심판 진행 중

- 수정헌법 14조(섹션 3)에서 “헌법 수호를 서약한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공직 참여를 금지한다”라고 규정
- 콜로라도, 미시건, 미네소타 등 10여 개 주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진행
- 11.17 콜로라도 법원은 트럼프가 1.6 의사당 침탈 사건을 주동하여 반란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으나, 수정헌법 14조 적용 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정하고,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인정 ⇒ 고발자 항소로 콜로라도 대법원 최종심
- 12.19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주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확정 ⇒ 트럼프 측, 연방 대법원에 즉시 항소 예고

< 트럼프 대통령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 >

① 대선 이전 1심 유죄 확정 ⇒ 트럼프 법정 구속 ⇒ 옥중 출마 강행

- 헌법이 규정한 대선 출마 자격에 기결수 또는 범죄 전력자를 제외하는 조항 부재. 따라서, 트럼프 옥중 출마 후 기결수 신분으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 배제 불가
- 당선 후 트럼프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상대로 3권 분리 위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- 또는 구속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사면 또는 형 집행 정지 가능성 ⇒ 위헌 소송 제기 ⇒ 연방 대법원이 셀프 사면 효력을 최종 판정하게 됨.
* 다만,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 판결에 한하며, 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행사 불가
-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가 분열을 우려해 트럼프 사면 가능성 제기

② 대선 이전 재판 미결 ⇒ 대선 출마 후 당선 ⇒ 신임 법무부 장관 기소 중지 명령

-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대선 이전에 기소된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
- 트럼프 정부 신임 법무부 장관이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연방 기소 건에 한해 기소 중지 명령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 가능. (단, 주 법원 기소 건에 관한 처분 불확실)

③ 수정헌법 14조에 근거 트럼프 피선거권 유지 또는 박탈 ⇒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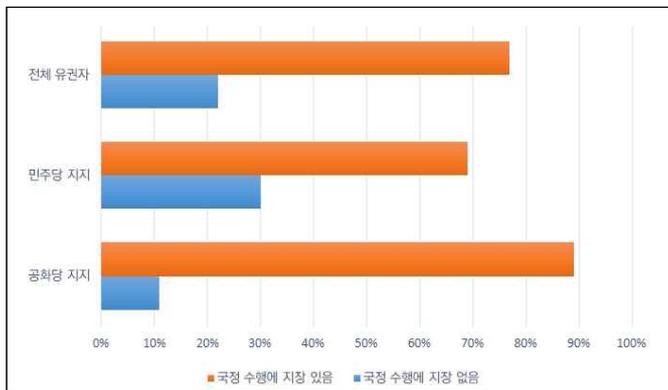
-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⇒ 트럼프 항소로 연방 대법원 재판 개시 ⇒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이 피선거권 인정 전망
- 대선 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 ⇒ 콜로라도 주내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성명 삭제 ⇒ 트럼프는 수기 기명 투표 독려 예상 ⇒ 기명 투표의 유효성에 법적 논란 소지 ⇒ 이론상 콜로라도 선거인단(10명) 없이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충분
- 현재 콜로라도 외에도 10여 개 주에서 트럼프 피선거권 제한 관련 소송 진행 중 ⇒ 연방 대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전체 50개 주 트럼프 피선거권에 중대 영향

[자료] 주요 언론 보도 종합 분석

③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민주당 지지층 불안 증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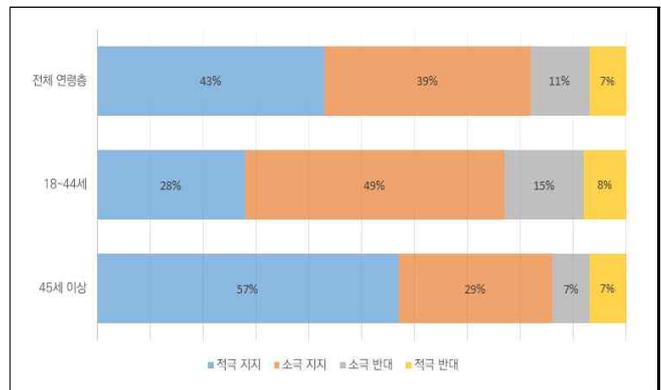
-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·건강 우려 속에 젊은 유권자로부터 미온적인 지지
 - 유권자 중 77%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우려를 표했고, 민주당 지지 유권자 65%가 바이든의 고령에 의문 제기(로이터 조사, 9.15)
 - 전체 민주당 지지 유권자 사이에 바이든 적극 지지율이 43%이나, 젊은 민주당 지지층(18~44세)에서 적극 지지 의사는 28%에 불과

<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대한 여론조사 >



[자료] AP/NORC 여론조사(8.10~14)

< 민주당 지지층 연령별 바이든 지지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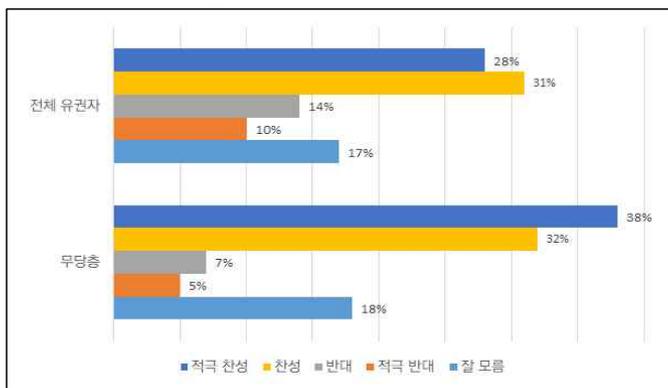
[자료] AP/NORC 여론조사(8.10~14)

-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이 40%에 육박 (CBS 조사 12.6~8)
 - 바이든 출마 반대의 이유로 △건강(93%), △임기 중단 사태(67%), 차세대 지도자 필요(62%) 등 나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대부분
 - 사회적 정의를 추구(87%)하는, 한층 진보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(85%)고 응답
 - 다만, 출마 반대 응답자 중 35%만이 바이든 대신 지지할 후보가 있다고 밝힘.
- 바이든 대통령 외에 민주당 진영 내 뚜렷한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
 - 희박한 경우이지만, 바이든 후보 중도 사퇴 발생 시 내년 8월에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4,000명의 대의원이 대체 후보 선출 가능
 - 카멀라 해리스(부통령), 개빈 뉴섬(캘리포니아 주지사), 피트 부티지지(교통부 장관), 그레첸 휘트만(미시건 주지사) 등 대안 후보 거론, 본선 경쟁력 한계 평가

④ 케네디 주니어 출마로 부상한 제3 후보 변수, 누구에게 악재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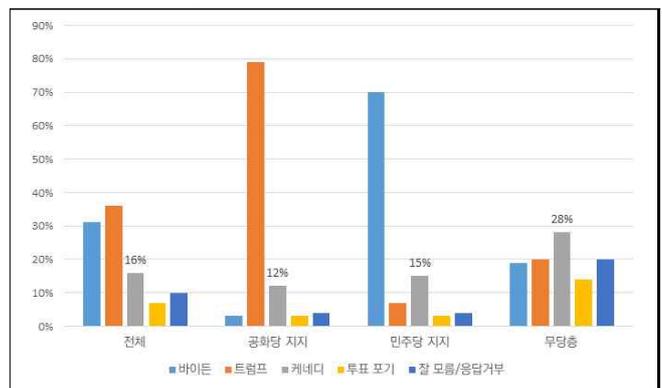
-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, 내년 대선에 독자 출마를 선언(10.9)해 중대 변수로 등장
 -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가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당선을 결정지은 전례 존재
 - * 1992년 로스 페로 후보가 약 19%를 득표해 클린턴 대통령 당선에 기여,
 - 2000년 랄프 네이더(득표율 2.7%)가 앨 고어-조지 부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
- 미국 유권자 사이에 양당 독과점에 대한 피로감과 제3 세력에 대한 기대감 고조
 - 최근 여론조사(Reuters/Ipsos 12.5~11)에서 양당제 정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, 대안 세력에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가 무려 59%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
- 케네디 출마가 트럼프보다 바이든 지지율을 더 잠식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
 - 케네디 지지 응답자 여론이 16%에 달해 본선에 상당한 영향력 과시
 - 바이든-트럼프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안 승부 팽팽
 - ⇒ 케네디를 추가한 3자 여론조사 결과 36:31로 트럼프가 바이든에 우위
 - 무당층 유권자층에서 케네디가 28% 지지를 얻어 트럼프(20%), 바이든(19%) 앞서

< 민주·공화당 외 제3 후보 지지 의사 여론 >



[자료] Reuters/Ipsos 여론조사(12.5~11)

< 바이든-트럼프-케네디 가상 대결 여론조사 >



[자료] Reuters/Ipsos 여론조사(12.5~11)

- 일부 여론조사 결과, 케네디 출마 시 각각 바이든과 트럼프로부터 각각 동등한 지지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분석 (Monmouth University, 11.30~12.4)
 - 케네디 지지율이 최대 21%를 기록한 가운데,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 각각 14%의 지지율을 흡수할 것으로 분석

⑤ 트럼프 카드는 공화당에 독일까, 약일까?

- 민주당 또는 중도층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강력한 비토 정서 확인
 - 반트럼프 유권자가 적극 투표장으로 집결하는 효과로 바이든 반사이익 가능
- 공화당 진영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세는 확실하나, 내년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카드의 유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여론 존재
 - 지난 '22년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의 후보 지지가 공화당 경선에서 플러스로 작용했던 반면, 본 선거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
 - '18, '20, '22년 연방의회 선거 분석 결과, 트럼프 지지가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들에서 평균 14% 플러스, 본 선거에서 1.5% 마이너스로 작용

< 연방의회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의 긍·부정 효과 분석 >



[자료] Michael Heseltine / Washington Post



[자료] Michael Heseltine / Washington Post

- 반트럼프 및 낙태 등 사회 이슈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부진 역력
 - '24년 대선 전 마지막 선거가 되는 올해 지방선거(11.7 개최)에서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공화당 우세 또는 경합지역 다수에서 약진
 - 민주당은 △켄터키 주지사 선거 △버지니아주 주의회 선거 △펜실베이니아 대법관 선거 △로드아일랜드 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 쟁취
 - 낙태권 찬반을 두고 열린 오하이오 주민 투표에서 56.6%대 43.4%로 찬성이 크게 앞서면서 내년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전국적 이슈화 전망

4. 2024년 트럼프 대선 정책 공약

경제·산업

□ 연방정부 예산 낭비 방지로 납세자 권리 보호

-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된 '재정 압류 권한'을 복원하여 방만한 정부 지출 통제 예고
 - * 재정 압류 권한(Impoundment Authority) :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도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당 예산 항목의 지출을 취소할 권한. 의회는 '74년 의회예산압류제한법 통과로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재정 압류 권한 행사를 제한한 바 있음.
- 트럼프는 행정부처별 예산 낭비 실태 파악 후, 재정 압류 권한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취소. 이로써 △재정 적자 축소 △인플레이션 완화 △감세 달성 주장
- 사회보장제도(노약자 공공의료보험 및 연금 등) 축소 절대 반대. 무익한 해외 원조, 불법 이민 지원, 각종 젠더·환경 프로그램 등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 재원 보존

□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통해 조속한 금리 정상화 추진

- 치솟은 금리로 인한 금융 불안, 리세션 우려 가중.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, 불필요한 규제 완화,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동시에 물가 억제 가능 주장

□ 미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'퀀텀 리프'(New Quantum Leap) 정책 제안

- 신도시 건설 :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공유지를 불허함으로써 전국 10개의 '자유도시'(Freedom City)를 건설 ⇒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
- 교통·운송 혁신 견인 : 수직 이착륙 운송 수단(Takeoff-and-landing vehicle)에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. 항공 모빌리티 기술로 신산업 및 교통수단의 대전환 실현
- 미국인을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 : '출산 보너스' 제공, 주택 공급 확대, 자동차 구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 공약
- 전략적 국가 제조업 이니셔티브 : 경제적 소외지역에 제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재도약 ⇒ 소외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수혜 지분 배분

- 전국적인 생활 환경 현대화 및 미화 캠페인 :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노후화한 도심 재개발, 공원 및 편의시설 개선, 모뉴먼트 건설 등 대대적인 토건 사업 추진

□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, 국내 자동차 제조업 활성화

- 바이든 정부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 전면 백지화.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 기업·노동자 권익을 훼손하고 중국 전기차 산업을 부양한다고 비판
 - 중국 등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보조금 제도 중단
- 불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규제 취소, 휘발유 가격 인하 등 정책으로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확대 ⇒ 전통 자동차 산업 기반 및 노동자 보호 추진
-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강력한 무역 수단 이용 불사. USMCA와 같은 무역 협정의 엄격한 집행,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 예고

무역·통상

□ 더욱 강력해진 '미국 우선주의' 무역정책으로 복귀

- 과거 자신의 '아메리카 퍼스트' 무역정책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, 물가안정, 고용 확대 등 경제 치적을 견인했다고 주장. 집권 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 표출
 - 미국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.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,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, 대중 규제, 국내 제조업 강화 등 정책 강화 예고

□ 전 세계 수입에 '보편적 기본 관세'(Universal Baseline Tariff) 제도 도입

- 자국민 대상이 아닌 외국 수입에 과세하는 것이 미국에 이롭고 정의롭다고 설파
 -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% 관세율을 추가 적용하되, 일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도입 검토
-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, 환율 조작 시도,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10% 기본 관세에 추가로 징벌적 세율 적용 방침

□ '트럼프 상호무역법'(Trump Reciprocal Trade Act) 입법 공약

- WTO 체제하에서 미국 수출이 외국과 비교해 고율의 관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
⇒ 국제 관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“눈에는 눈, 관세에는 관세” 원칙 요구
* 전 세계는 미국 보다 평균 2배 높은 관세율 적용(중국은 341%, EU도 50% 이상 고율 적용)
- '트럼프 상호무역법'을 제정하여 미국-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평등화
- 대통령은 미국이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 수출에 적용하도록 외국과 협상하고, 합의 불발 시 상응하는 고율 관세를 명령하도록 제도화

□ 대중 의존 완전 종식을 위한 무역정책 추진

- 중국의 '항구적정상무역관계'(PNTR) 지위 박탈.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, 고율의 대중 관세 체계 신설 주장
- 중국의 제3국으로 통한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수립
-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및 매각 종용
- 중국인(기업)의 미국 에너지, 기술, 통신, 농업용지, 천연자원, 의약품 및 기타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 금지. 중국의 기투자 자산은 매각하도록 강제 추진
-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(핵심광물 포함)하는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
- 안보·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의 미국 내 영업 금지 등 주장

□ 인도·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 취입 즉시 폐기

- IPEF를 자신이 폐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의 버전 2라고 폄하하며,
- “아시아로 아웃소싱을 촉진하여 미국 농업·제조업을 침탈”하는 IPEF 폐기 공약

에너지·환경

□ 값싼 에너지·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자립 및 제조업 부흥 촉진

-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미국·비시장·비생산적으로 규정, 전면 폐지 주장
- 에너지부 등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중단, 각종 환경 명목의 비시장적 규제 철폐

- 셰일·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등 정부 지원 총동원
 - 전통 에너지 산업 중흥으로 인플레이션 완화, 경제 성장, 고용 창출 견인 주장
 -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및 AI 경쟁력 추동
-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, 미국 에너지 잠재력을 위협하는 그린뉴딜 일체 중단
- 핵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핵 시설 재가동 및 소형 모듈 원자로(SMR) 기술 육성

□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 철폐

- 바이든 정부 ESG 투자 규정이 은퇴자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
 - 이에,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발휘해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을 중지하고, 추후 의회와 협력 입법을 통해 영구 금지하겠다고 공약

보건·의료

□ 대중 의약품 의존 종식으로 국내 보건 공급망 재건

- 국내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미국산 조달을 의무화하는 ‘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및 의약품 수입에 단계적 관세 도입 방안 제시

□ 대형 제약사의 국내외 의약품 가격 차별 시정

- 행정명령으로 제약사의 외국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, 미국 내 가격은 인하하도록 압력

□ 아동 만성 질환에 대처

- 급증하는 아동 만성 질환 대처를 위한 대통령 특별 위원회 신설. 대형 제약사 등의 의료 카르텔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

□ 국내 마약 중독 문제 해결에 총력

- 국제 마약 카르텔 소탕과 밀수 방지를 위한 군사 자산 및 외교적 역량 동원. 마약 거래상에 사형 입법 추진, 펜타닐을 연방 관리 물질 지정, 중독자 재활 정책 확대 등

외교·안보

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즉시 종결

- 취임 후 24시간 내 협상을 통해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
 - 국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제3차 대전으로 확전을 예방

미국의 고갈된 국방력을 재건

-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복원하여 동유럽의 평화와 안정 정착
 -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투입된 예산 2,000억 달러를 EU에 배상 요구
- 군대 재건을 위해 기록적 예산 투입과 미군의 전통과 자부심을 고취할 지원책 마련

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

- 전 세계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온 돔과 같은 최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최선

기타 정책

(이민)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중단

- 불법체류자 대상 일체의 무상 복지 제공 중단.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공주택 임대 금지 재개, 모든 취업 허가 중단, 불법체류 출생자에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등

(치안)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계획 공개

- △지방 경찰 예산·인력 확충 △경찰의 제한적 불심검문 권한 인정 △검찰의 불기소 권한 행사 감사 △조직·마약 범죄와 전쟁 △미성년자 처벌 기준 개정 등 내용

(교육) 미국인들이 무료로 고등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설립

- 대형 사립대학의 기부금 펀드에 과세함으로써 아카데미 설립 재원 마련 추진

참고자료 **트럼프의 정책 참모가 제안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2.0**

◆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, '자유무역 도그마와 헤어질 결심'

- 올해 6월 저서 '공짜 무역은 없다.' (No Trade is Free) 출간
 -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입안, 미중 무역 협상 진두지휘. **트럼프 재집권 시 재기용 전망**
- 중국과 '전략적 디커플링'을 주장하는 등 **고강도 탈 중국 정책 시사**
 -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까지 중국의 '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'(PNTR) 지위 박탈 주장
- **동맹·우방국과 무역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관철** 요구
 - FTA 체결국 및 우방국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한 **강력한 무역 조치 필요성** 역설
- **WTO 등 다자 경제 협력 체제 불신임,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 개혁** 요구

◆ 피터 나바로 전 무역보좌관,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이론적 토대 제공

- 헤리티지 재단 발간 '2025년 보수 집권 정책 의제' 보고(23.4월)에서 무역 분과 저술
-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**WTO 최혜국(MFN) 대우 제도 문제 시정** 주장
 - 외국이 **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하게 높은 관세**를 부과하고 있다며 통계 수치로 입증
- 국제 관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**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** 필요
 - '미국 상호무역법' 입법 실현으로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가 583억~636억 달러 감소 분석
 - 주요 교역 상대국(일본, EU 등)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요구
- 중국의 중상주의적, 비시장 관행에 맞서 **매파적 대중 무역 조치 주문**
 - (1) 모든 중국 수입품 대상 관세 인상 (단, 전략 물자 수급 고려 필요)
 - (2) 미국 기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세제·금융 지원 확대
 - (3) 중국산 미소 수입 관세 면제 제도 폐지
 - (4) 중국 국영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
 - (5) 틱톡, 위챗 등 모든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영업 중지
 - (6) 중국의 대미 첨단 기술 관련 투자 금지
 - (7) 미국 회계 감사 기준 미충족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폐지 등
 - (8) 의약품, 반도체, 핵심 광물, 군수 제품 등 대중 디커플링